

세금은 86% 늘었는데... 광주 버스, 왜 더 줄어들었나

# “행정통합 현실화... 광역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광주 시민단체가 지역내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요금 인상보다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광주 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노선 수는 101~102개 수준으로, 정류장 수는 2379개를 기준으로 오르내리면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의 양을 보여주는 총 운행거리의 같은 기간 8만211km에서 7만1584km로 10.8% 줄었다.

2024년 승객 수는 10만4638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만6704명)의 82.6% 수준에 머물렀고 운송수입액도 82.5%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늘었다. 2019년 73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24년 1364억원으로 86.2%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액의 약 127%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운송원가도 빠르게 상승했다. 먼하차량 대형 기준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2019년 64만6618원에서 2024년 78만8484원으로 올랐다. 운송종사자 인건비는



42만888원에서 51만8975원으로 증가했고 연료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 자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구조개혁 대신 요금인상으로 적자 폭을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준공영제는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노선과 요금은 광주시가 결정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재정 부담은 공공에 집중되고 경영 책임은 흐려져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시대에 대비해 광역 교통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광역 버스 확충과 간선·지선 체계 재편, 주요 생활권 연결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송현근 기자

##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전남·광주경찰 특별 단속·홍보

전남·광주경찰이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특별 단속과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 날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오는 3일 프로야구 개막전 등 시민들을 상대로 약물 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 방법은 행동 조사와 간이 시약 검사 2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나 음성이 있어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이 임의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우선 단속 경찰관은 차선을 넘나드는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언행과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하차시킨 뒤 운전자가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할 수 있는지 1차 현장 평가를 한다.

현장 평가 이후에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나 음성이 있어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이 임의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 ‘가상자산 악용’ 3000억원대 베트남 환치기 조직 잡혔다

### 가상자산 이용 수출대금 불법 송금·영수 대행

광주본부세관은 2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301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3010억원대 자금을 한국과 베트남 간에 불법적으로 송금·영수한 환치기 조직의 귀화 베트남인 A(30·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베트남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

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들도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금융계좌가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금융사기 피해신고인으로부터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돼 기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

수의 신고로 탈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텔레그램(SNS)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 중이다. /박석우 기자

##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규모 조직 구성... 선거용? 눈초리

### 광주교육청 320명... 전남교육청 555명 가동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통합을 앞두고 시·도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을 별도로 운영키로 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도민 조직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을 대비하고 지역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 320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32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시·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정책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다고 광주교육청은 설명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15일부터 5월15일까지 1개월 간 공청회, 분과별 협의회에 참여해 교육행정 통합 관련 제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달 26일 시·도민 555명이 참여한 교육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 교육비전 위 위원들은 50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5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전남광주교육행정 통합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양 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 실무단을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발전위원회와 비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

다.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0명과 55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교육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직 교육감 ‘선거용’이라는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행정 조직을 동원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현직 교육감의 정책 추진 기반이자 우호적 참여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염선호 기자

## “그냥 화나서” 친인척 집 불질러... 부부 두고 나홀로 탈출

구 내 거실에서 불을 지르고 입주민 부부 60대 B·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41분만에 꺼졌으나 아파트 입주민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친인척 관계인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B씨 부부를 내버려

두고 혼자 탈출하기까지 했다. A씨가 낸 불로 B씨 부부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치료 중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부터 발부 받았다. /이승원 기자

## ‘지인 신고로 탈미’ 마약 투약 40대 현행범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오후 11시40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케타민을 투약했고, 옆에 있던 지인

의 신고로 탈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텔레그램(SNS)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 중이다. /박석우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